

격월간
정세와 동향

제9호

[2013_08_09]

모심의 살림의 노 길

이슈 진단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익' 논란

국익이 곧 공익인가? 대안적 공익 개념을 위하여

분야별 동향

농업·먹거리 | 경제·생활 | 사회·환경 | 정치·사회운동

살림의 말

한살림, '협동공동체'를 꿈꾸다

'쌍호공동체'와 '흙공동체'를 통해 본 '농민' 생산자의 꿈



모심과 살림 연구소

- 목 차 -

이슈 진단

-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익’ 논란 1

분야별 동향

[농업 · 먹거리]

- 식량 위기를 부추기는 ‘물 정점’(peak water) 문제 7
- GMO에 대한 우려의 확산과 GMO 완전 표시제 요구의 확대 8
- 대학에 불고 있는 농업,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 10
- 캐나다 지자체들의 먹거리 정책과 전략 11

[경제 · 생활]

-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계 경제와 소득 수준 14
- 양극화 시대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화 필요 15
-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미칠 먹을거리에 대한 위기 16
- 맛 대신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소고기 등급제가 필요 18
-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 현황 20

[사회 · 환경]

- 기후변화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변화 24
- 갈수록 우려를 자아내는 후쿠시마의 방사능 유출 사태 25
- 농약 사용에 따른 ‘꿀벌’의 군집 붕괴 현상과 그 심각성 27
- 산림복지와 치유농업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8

[정치 · 사회운동]

-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태 31
- 정전협정 60주년과 북방한계선(NLL) 논란 32
- 정당공천제와 정치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34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맨이 아니다? 35
- 끝나지 않은 위안부 문제와 평화를 향한 걸음 37
- 정전 60년,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 꿈꾸기 38

살림의 말

- 한살림, ‘협동공동체’를 꿈꾸다 42

이슈 진단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익' 논란

- 국익이 곧 공익인가? 대안적 공익 개념을 위하여 -

■ 4대강 사업 강행의 명분이 되었던 '국익' 논리가 이제는 그 부실과 부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지난 이명박 정부가 국민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내세웠던 주요 논리가 바로 '국익'이었음

· 4대강 사업은 국익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종교계와 생명운동단체, 시민들의 4대강 반대 목소리는 '국익 훼손 행위'라는 것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기본 인식이자 주장이었음

· "4대강 사업을 소수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절대 환영한다. 지금 4대강변에 가보면 천지개벽한다"(2011. 10. 8)

- 이명박 대통령, 남한강 자전거길 길트임 기념식에서

· "4대강 살리기는 오염된 강, 병든 강을 되살리고 우리 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010. 3. 24)

- 정운찬 국무총리, 세계물의 날 행사에서

· "일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생명을 죽인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2010. 3. 26)

- 이만의 환경부장관, 갑천물놀이공원 새물길 열기 행사에서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2013. 1. 1)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2013년 신년사에서

- 최근 들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부정이 속속 밝혀지고 시공 업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과 비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9년부터 12년까지 총 22조원이 넘게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올해 1월 "4대강 사업이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며,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와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이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7월 말에는 감사원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직원의 사무용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지난 정부 내내 대운하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해 왔으며 국토교통부가 관련 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했다는 사실도 밝혀냄
 - 한편, 검찰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도화엔지니어링 등 4대강 건설 참여 업체의 전 현직 대표와 임직원을 소환해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를 밝혀내고, 정치권이 결합된 권력형 비리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음
 - 4대강 건설에 참여했던 현대·대우·GS·포스코·SK 등 8개 건설사들은 이미 지난해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음
 - 이런 가운데 작년 10월 25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관련자 총 1,152명에 대해 정부가 포상을 한 바 있음. 하지만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까지 포함된 포상자 명단과 기준을 아직 공개 않고 있음
 - 여기에다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추진해온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반년이 지나도 구성조차 못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새누리당과 야당이 합의한 국회의 국정조사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을 별도로 구성해 직접 검증에 나섬. 국민검증단은 8월 5일부터 나흘간 현장조사를 실시해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해진 녹조현상과 역행침식, 보 구조물의 안전성, 생태계 교란, 농지침수 피해 등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음
-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이 속속 밝혀지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찬성 측은 여전히 국익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음**
- '4대강 정비가 끝나면 반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해 온 4대강 사업 찬성 측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에 대해 지난 정부를 폄하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음
 - 심지어 4대강 사업을 주도해 온 수자원공사와 건설업체들이 태국의 물 관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당에 4대강 사업을 조사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함. 즉 지금은 국익을 위해 추진해 온 4대강 사업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사업 성공을 적극 홍보할 때라는 것임

■ 태국 물 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민간환경단체의 비판이 국익 훼손 행위로 몰려 곤혹을 치름

- 4대강 사업 실적을 토대로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물 관리 사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적극 참여해 왔음

- 태국은 2011년 대홍수로 800여 명의 사상자와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피해를 겪은 후 총 6천km에 달하는 25개 강에 11조 원 규모의 치수통합관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자에 대한 국제 입찰을 진행해 왔음
- 지난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4대강 사업 참여업체들로 컨소시엄을 만들어 4대강 사업의 해외수출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적극 참여해 지원해 왔음
- 작년에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정부 초청으로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했고,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태국을 방문해 4대강 사업을 홍보한 바 있음. 올 1월에는 국회의원장이, 5월에는 국무총리가 태국을 방문해 한국의 물 관리 사업을 홍보함
- 그리고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수자원공사가 태국의 물 관리 사업 중에서 6조 2천억 원 규모의 방수로와 임시저류지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힘
- 태국 정부는 이번 물 관리 사업에 참여할 최종 낙찰자를 오는 10월에서 11월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태국 물 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말 태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자원공사의 수주 능력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6조 원 규모의 대형 건설사업 수주를 방해한 '국익 훼손' 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음
- 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수자원공사의 사업 능력에 문제제기 하면서 '부채 증가율'이 700%에 달한다고 한 이야기가 태국 언론에 '부채 700%'로 잘못 보도되고, 이것을 국내 언론들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하면서 논란을 증폭시킴. 이후 태국 언론이 오보를 인정하고 국내 언론들도 정정 보도를 내보냈지만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국익 훼손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음
- 4대강 사업의 책임 주체인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론 4대강 사업을 지지해 온 주요 언론들은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해 '매국 행위', '이적 행위', '반국가적 행동', '천인공노할 일' 등의 표현을 동원해 무차별적 공격을 하고 있음
- 언론의 오보가 확인되었음에도 환경단체에 대한 비판에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데는 태국 물 관리 사업에 대한 참여를 4대강 사업의 모범 수출 사례로 홍보해 온 정부의 입장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인 올 1월에

이미 국무회의에서 태국 물관리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반대하는 NGO 활동은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관계 부처의 대책을 지시한 바 있음

- 이번 환경운동연합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비판을 통해 촉발된 국익 논란 사태는 국익의 본래 개념과 그 활용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함을 일깨워줌

-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익도 중요하지만 환경은 국경을 넘는 문제'로서, 해외 수많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지구 생태계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음을 주장함
- 또한 우리의 국익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물 관리 사업이 현지 주민과 지역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실제로 태국 현지에서는 해당 사업 권역에 있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이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물 관리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와 함께 태국 중앙행정법원 또한 정부에 대해 물 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환경 및 주민건강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도대체 '국익'이란 무엇인가? 국익 개념을 둘러싼 갈등 및 도전과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

-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들이 갈등 현안으로 등장할 때마다 '국익' 논리가 논란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됨

- 문제는 사회 전체적 통합과 질서의 명분으로 당연하게 적용되는 국익 논리가 현실에서 역설적으로 분열과 억압의 기제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 새만금과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측과 반대 측이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부딪힐 때마다 국익 논리는 국책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음. 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해당 사업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억압하는 데도 국익 논리가 여지없이 등장하고 있음. 국익 논리의 이러한 활용법은 농업계의 희생을 전제로 한 FTA 추진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국익 논리는 이념적인 갈등을 부추겨 특정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 이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NLL

논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논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국익 논리가 그동안 해당 국가와 사회에 정당성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국익이 곧 공익'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임

- 사실 국익을 판단하는 기준과 구성 내용은 해당 국가의 성격과 권력의 정당성, 시대적 환경과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짐. 그럼에도 국익 논리는 국가가 권력을 행사 하고 정책을 결정해 국민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고 나아가 개인과 집단의 특정 행 위를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 이처럼 국익 논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데는 '국익이 곧 공익'이라는 믿음, 즉 국익 실현과 사회 전체적인 공동의 이익 보장이 다르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 이런 인식 체계는 한편으로 국가 영역의 보편적 이 익을 공익(公益)으로, 사회 영역의 개별적 특수 이익을 사익(私益)으로 구분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 왔음
- 하지만 국익과 공익 사이에 필연적 연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사적 이해 관계들의 경쟁적 갈등에 대한 공정한 조정자로서 국가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적 환경이 국익과 공익 사이에 강한 결합을 만들어 냈음
- 우리나라 역시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어진 분단 체제 상황에서 국가발전과 사회 통합의 과제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국가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주의적 공익 개념이 상당한 영향력과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음

- 하지만 사회가 분화되고 가치가 다원화되면서 국익과 공익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 고, 공익과 사익을 포함해 다양한 이익들이 충돌하는 변화된 상황을 맞게 되었음

- 1980년대 이후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 치와 욕구들이 분출하면서 국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국 익과 공익, 사익에 대한 관념에도 변화가 일어남
-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와 사회,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는 개념의 경계가 점점 희미 해지기 시작했고, 국익 판단의 주체로 시민들의 참여 욕구가 분출하면서 절차적 공정성과 공개성의 원칙을 소홀히 한 국익 논리는 점점 그 설득력을 잃게 됨
- 이런 가운데 국익을 앞세운 정부 정책과 개발 사업들을 둘러싸고 입장을 달리하 는 지역이나 집단의 반발과 갈등들이 빈발해지고, 심지어 정부 부처 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놓고 갈등하는 현상들을 자주 보게 됨
- 또한 개인의 양심에 따른 공익 제보와 국익 논리가 서로 부딪혀 갈등을 빚는 사 례들도 빈발하고 있음. 최근 미국 정부의 정보감시 프로그램의 존재를 폭로한 에

드워드 스노든의 러시아 망명 사태를 놓고 미국 정부의 '국익 침해' 주장과 국민들의 '알 권리' 주장이 충돌하는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음

- 결국 이런 상황 변화는 국익의 이름으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이기주의로 내몰거나 개인의 사적 영역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국익 논리가 국가 권력기관과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정당화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발전 경로가 남긴 유산에다 분단 체제에 기반한 이념적, 군사적 갈등 상황이 국익 논리를 대외관계 보다 안보와 치안을 앞세운 내부 통치 기제로 활용하게 만든 측면도 있음

- 사익에서 공익으로의 질적 전환과 사회적 공공성 실현의 과제

- 그동안은 다양한 사익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조정, 조율해서 공익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국가의 개입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각각 강조되어 왔음
-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기존 국가 영역들에 있던 것들이 사적 영역으로 이전되면서 나타나는 공익의 사익화 현상과, 시장의 무한경쟁 속에서 소수 기득권층의 사익 추구가 다수의 사익과 사회 전체 공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함
- 결국 공익과 사익을 새로운 차원으로 연결시켜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고 확장시켜낼 수 있는 대안적 공익 개념이 필요함. 이것은 사익을 초월해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감과 합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사익의 단순한 결합물이거나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사익의 질적 전환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범이자 가치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지금과 같은 '공공성 위기'의 시대에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의 선호와 이해관계(私益)가 자발적 합의 과정을 통해 공동의 이익(共益)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익 범주를 넘어서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이웃들, 미래 세대, 자연계 및 생명들의 생존과 이익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차원의 공익(公益) 즉 홍익(弘益)의 영역을 창출하고 확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새로운 역할도 중요함. 협동조합은 일찍부터 사적 자원들을 결집시켜 협동의 원리로 공공화시켜내는 데 중요한 경험들을 축적해 왔으며, 조합원 출자금 제도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체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

분야별 동향 1

농업·먹거리

● 식량 위기를 부추기는 '물 정점'(peak water) 문제

- 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물 정점'(peak water)이 지금 시대의 주요 위기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음

- 지구정책연구소 소장 레스터 브라운은 '석유 정점'(peak oil)에 대한 위기는 최근 몇 년간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지만 '물 정점'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석유는 대체할 수 있고 석유 없이도 식량생산이 가능하지만 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 부족은 인류의 미래에 진정한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분석임

-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이 물 정점 사태를 촉발시키고 있음

- 지난 6천 년 전부터 강을 가로질러 댐을 건설하고 땅에 물을 끌어대는 관개방식은 한계에 달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댐을 건설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본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기 시작했음
-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인 대수층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비가 내리면 채워질 수 있지만, 대수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지질이 형성되던 아주 오래전에 축적된 물로 재충전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재충전 될 수 없는 화석 대수층의 주요 지역은 중국 북부 평원 아래와 미국 대평원 아래에 있음
- 문제는 그동안의 관개방식이 과도한 물 추출에 의존해옴으로써 지하수면이 건조해지고 샘이 말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심각한 식량 위기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임

- 물의 과잉 추출에 따른 식량위기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오늘날 주요 대수층에 위치하면서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미국을 비롯한 18개 나라들이 물을 과잉 추출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들이며, 한국 또한 여기에 해당됨
- 중국의 경우 식량의 4/5를 관개지에서 수확하고 있는데, 지하수면 감소가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밀 생산의 절반, 옥수수 생산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북부 평원 아래 지하수면이 급속히 건조해지고 있으며, 해마다

지하수 개발을 위해 뚫는 암반의 깊이가 20년 전에 비해 5배나 증가하였음

- 결국 물 부족으로 인한 식량 생산의 한계는 중국 자체는 물론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는 주변국들의 식량 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물 부족 문제는 종교적, 민족적 갈등을 겪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새로운 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수량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면 식량위기나 자원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GMO에 대한 우려의 확산과 GMO 완전 표시제 요구의 확대

- EU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GMO 종자와 작물에 대한 대응책들

- 헝가리 정부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몬산토 GMO 종자로 재배되는 것으로 확인된 옥수수 발 1,000에이커를 불태우는 조치를 취하고, GMO free를 위한 점검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이탈리아의 건강, 농업, 환경부 세 장관이 환경적인 우려를 언급하면서 몬산토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 재배를 금지하는 법령에 사인했다고 지난 7월에 농업부 장관이 발표함. 이탈리아 장관들은 GMO가 비(非) GMO 작물들과 교차수분 되고, MON810 옥수수 꽃가루가 꿀에 전이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함. 이로 인해 EU 8개국(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룩셈부르크, 그리스, 불가리아, 폴란드)에 더해 이탈리아가 GMO 재배 금지 대열에 합류하게 됨

- 미국에서도 주 차원에서 GMO 표시제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64개국이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GMO 표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지난 6월 코네티컷주가 처음으로 GMO 표시제를 통과시켰고, 25개 주 의회에 GMO 표시제 의무법안이 제출되는 등 GMO 표시제 요구가 미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한편, GMO 표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국에서 GMO 표시제가 시행되는 데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됨. 주 입법의원들은 자신들 지역에서 GMO 표시제가 통과될 경우 몬산토와 같은 기업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소송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주 차원에서 GMO 표시제를 허용하는 법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GMO 표시제가 자국 산업의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음

- 한국 제분협회가 GMO 논란 미국산 밀 수입을 재개함

- 지난 5월 미국 오리건 주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가 승인된 바 없는 GMO 밀이 발견돼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밀의 국내 수입이 재개됨
- 동아원,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국내 제분업체들 모임인 한국제분협회는 '매년 미국을 비롯한 밀 수출국 정부로부터 GM 밀이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 제분용 밀을 수입해왔다'며 수입 밀에 대해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수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힘
- 이에 대해 업계의 수입 재개 결정이 성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는 미 농무부의 발표는 상업적 판매 및 자연방출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으로,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 과거 몬산토사가 유전자조작 밀 실험을 했던 16개 주로부터 자연 방출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우리나라의 GMO 자생 실태에 대한 점검과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GMO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로 연구 목적 외에는 재배가 불가능함. 그럼에도 GMO 자생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음
- 최근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GMO가 발견된 지역은 47곳에 달하며, 옥수수가 28곳으로 가장 많음. GMO 옥수수가 주로 발견된 지역은 강원도와 경기도 인근으로 지역의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관련해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제품의 주요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GMO가 첨가됐으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함
-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GMO 관리대책이 부실한 현실에서 GMO 안전성 검사와 함께 GMO 완전 표시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들은 GMO 표시제 확대에 관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1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음
-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10만인 서명은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단체와 농업, 먹거리 단체들이 참여하는 'GMO반대생명운동연대'에서 7월 22일부터 시작했으며, 서명을 통해 GMO 유출이나 미승인 GMO 수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GMO 완전표시제 강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것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엄격한 이력추적제도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대학에 붙고 있는 농업,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¹⁾

- 일본에서 국공 사립을 포함해 35년 만에 대학에서 농학부를 신설함

- 일본의 유명한 불교계 사립대학인 류코쿠 대학(교토 소재)에서 원래 없었던 농학부를 신설해 2015년부터 정원 400명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개교를 준비중에 있음.
- 농학부는 식물생명과학과, 자원생물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식료경제학과의 4개 학과로 구성될 예정으로, 농학부의 슬로건을 <"생명"을 지탱하는 "먹거리(食)"를 생각하면서 "농"을 학습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 농학부의 설립 취지²⁾

"본 학부에서는 자연과학 영역에 축을 두면서 사회과학 영역도 포섭하는 농업교육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와 이를 지탱하면서 인간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농'이라는 두 관점에서 각각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계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에서는 농작물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재생'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을 '식의 순환'으로 파악해 이를 과학적으로 고찰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순환 프로세스에 내재하는 '농'과 '식'에 걸려있는 문제들과 상호관련성을 발견하고, 그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탐구하고 인류와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먹거리 안전·안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담당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학부에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견지에서 '식'과 '농'에 걸리는 문제들을 파악해 자연과 인간사회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현재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다면적으로 사물을 생각, 판단,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 농학부의 설립 목표

1.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향한 대처 :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식의 본질"과 "농업의 역할"의 변화를 유연하게 파악해 기성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차세대 농업 정책과 농업 관련 산업, 농업 기술 및 식육(食育)의 모습을 고찰합니다.

2.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대처 : 시대와 함께 복잡해지는 작물 육성의 제반 과제의 해결을 위해,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판단·실행하는 힘을 양성하기 위해 작물 및 육성기술의 본질을 생명과학과 농업과학의 양면에서 가르칩니다.

1) 이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 허남혁 책임연구원이 모심과살림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정리한 것입니다.

2) 류코쿠 대학 농학부 홈페이지(<http://www.ryukoku.ac.jp/agr>) 중에서

3. 농장 실습을 통한 실천적인 대처 :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를 이해하고, '식'과 '농'이 제공하는 '기쁨·감사'를 친근하게 실감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농장 실습을 기반으로 학과 횡단형 체험학습 및 강의를 이수하고 실천과 이론을 교차한 "식의 순환"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4. 지역에 기반한 활동(생협교육, 지역공헌활동) : 간사이의 '식'을 지원하는 "농업"을 수행하는 시가 현과 교토에 위치한 류코쿠 대학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간사이 농업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의 해결을 위해, 농촌과 농업 관련 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적인 노력을 하여 지역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접점 만들기"에 노력합니다.

5. 세계화 노력 : 전 지구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식'과 '농'을 둘러싼 문제를 복합적으로 파악하여, '세계화 시대'의 농업 정책과 농업 지원 방향에 대해 국내의 상황과 함께 세계정세를 주시하는 교육 연구에 임합니다.

- 일본 외에도 해외 대학들에서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활발해 지고 있음

- 최근 미국과 유럽의 대학들에서도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사회과학적, 정책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 이런 경향은 그만큼 먹거리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안 모색이 활성화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학에서 농과대학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대학 명칭도 농과대학에서 생명과학, 환경과학 등으로 바뀌음. 따라서 최근에 불고 있는 해외 대학들의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변화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 캐나다 지자체들의 먹거리 정책과 전략³⁾

- 캐나다 밴쿠버 시의 먹거리 전략계획

- 2013년 1월, 밴쿠버 시는 밴쿠버 먹거리 전략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비전과 5대 목표와 5대 분야별 실천 과제들을 도출함

3) 자료1: City of Vancouver, 2013, What foods us: Vancouver Food Strategy.
(<http://vancouver.ca/files/cov/vancouver-food-strategy-final.PDF>)

자료2: MacRae R. and Donahue, K. 2013, municipal food policy entrepreneurs: A preliminary analysis of how Canadian cities and regional districts are involved in food system change.
(<http://tfpc.to/wordpress/wp-content/uploads/2013/05/Report-May30-FINAL.pdf>)

- 밴쿠버 시 먹거리 전략계획의 5대 목표
 - ▶ 목표 1: 먹거리 친화적으로 근린 지원
 - ▶ 목표 2: 시민의 실천역량 강화
 - ▶ 목표 3: 모든 시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증진
 - ▶ 목표 4: 밴쿠버 녹색경제에서 먹거리를 핵심에 놓기
 - ▶ 목표 5: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여러 파트너들과 중앙정부/주정부/기초지자체들과 협력

<표 1> 밴쿠버 시 지역먹거리체계의 실천 영역

실천 영역	우선 순위
1. 먹거리 생산	모든 형태의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며, 먹거리체계의 다른 분야들과의 연계를 강화함
2. 시민 역량강화	시민들(특히 취약계층)의 먹거리 네트워크 및 기타 지역사회의 먹거리 프로그램 활동 참여를 증진함
3. 먹거리 접근성	먹거리 판로(농민장터, 지역공동체 시장, 먹거리 소매 프로그램 등)를 다각화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산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함
4. 먹거리 가공 및 유통	로컬푸드의 가공, 저장, 유통 인프라와 로컬푸드 지역경제가능성 간의 격차를 좁혀나감 시 공공기관들의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공공조달 비율을 증진함
5. 먹거리 폐기물	먹거리 폐기물의 감축

- 캐나다 먹거리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 밴쿠버의 먹거리 정책이 발전해 온 데는 지자체 '먹거리정책위원회'(Food Policy Council)의 역할이 주요하게 작용했음. 밴쿠버는 2004년 먹거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에 밴쿠버 먹거리헌장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민관협력 노력들을 기울여온 결과 이번 전략계획을 도출할 수 있었음
- 먹거리 정책의 변화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대도시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이미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은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 비전과 전략계획, 실천전략을 수립해 실천해 가고 있음

<표 2> 캐나다 지자체 먹거리정책 프로그램의 공통 활동 영역 예시

영역	사례
접근성과 형평성	의사결정에 대한 지역공동체 참여, 건강한 먹거리 접근 및 먹거리소매점 프로젝트, 먹거리 사막(food desert) 지도 작성, 노인 먹거리지원 프로그램,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경제발전	소상공업 마케팅 지원/자금지원, 푸드허브, 일자리 훈련프로그램, 먹거리 트럭, 농민장터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식재료 조달, 생태발자국, 기후변화 계획
먹거리교육	음식시민 프로그램, 건강한 요리 시연, 학교텃밭
로컬푸드	농가에서 식탁으로 프로그램, 기관 공공조달 프로그램, 법제화
이동식 판매	이동식 먹거리카트의 활성화, 이동식 판매트럭 허가비용 인하
영양 및 보건	농민장터 전자쿠폰 사용, 메뉴 표시, 건강한 식사 프로그램, 아동 영양 프로그램
정책	주정부 및 연방정부 정책압력, 지자체 먹거리 현장 제정
도시농업	용도구역 개정, 지역공동체텃밭 프로그램, 온실 활용
폐기물관리	폐기물 퇴비화 프로그램, 음식쓰레기 수거

- 한편, 우리나라 자치단체들도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중심에 놓고 종합적인 실천 계획과 전략을 마련해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체계 속에서 생활과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최근 들어서 서울시를 비롯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정책적 변화들이 지역별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음.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전체적인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협을 포함해 농업과 먹거리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해 온 단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 특히 내년 2014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과 먹거리 운동 단체와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서 지역 차원에서 공론화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함

분야별 동향 2

경제 · 생활

●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계 경제와 소득 수준

-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경제 수준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
 - 국가적으로 지난 2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전 분기보다 1.1% 상승했고, 2년 3개월간 연속 흑자를 이어온 경상수지도 지난 6월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거시적인 경기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가계 경제는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음
 -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64%가 최근 1년 사이에 예금과 적금, 보험과 펀드 같은 금융상품들을 중도해지 했다고 함
 - 이는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높아져 가계 경제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지난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 평균 명목소득이 419만 3천원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임
 - 반면, 부채와 지출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고 답한 가운데, 빛이 늘어난 이유로 '주택 구입 또는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주거 관련 비용 증가가 30.9%, '자녀교육'(27.9%), '사업부진'(25.5%) 순으로 꼽았음
 - 전세값은 2011년 이후 50주째 상승하며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요금(3.3%), 주류 및 담배(1.8%), 오락 및 문화(1.7%), 음식 및 숙박(1.6%), 의류 및 신발(1.4%), 교통(1.0%), 교육(0.8%)과 같은 생활물가(2013년 7월)도 전년대비 평균 1.4%p 상승함
-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 한국 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 소득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은 기업 이익이 근로자에게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함. 기업의 소득 증가율은 1990년대 연평균 12.4%에서 2000년대 10.5%로 나타난 데 비해, 가계 소득 증가율은 같은 기간 11.7%에서 6.8%로 반토막 났기 때문임
 - 법인기업의 영업이익과 임금을 비교한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1990년대 영업이익 증가율과 임금 증가율이 1.1%p인 데 반해 2000년대에는 3.0%p로 격차가 확대됨
 - 가계 소득에 포함되는 소규모 자영업 영업이익의 낮은 증가도 가계소득 둔화의 한 요인임. 법인기업 영업이익 증가율과 자영업 영업이익 증가율이 1990년대 2.6%p에서 2000년대 8.7%p로 그 격차가 확대됨. 여기에는 대형마트와 SSM의 골

목시장 진출과도 관계가 깊은 것으로 해석됨

- 가계 순이자소득이 급감한 것도 가계 소득 감소 요인으로 꼽힘. 1990년대 가계의 수취이자와 지급이자는 15% 범위에서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수취이자 증가율은 연 평균 0.6%로 정체된 반면, 지급이자는 4.8% 늘어나 순이자소득이 크게 감소함
- 이처럼 가계 소득의 감소는 소비수준 저조, 가계저축률 하락, 투자 증가 둔화 등을 초래해 만성적인 내수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계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양극화 시대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화 필요

-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임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은 근로자 급여 산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출산 휴가의 하한액, 사회보장급여와 산업재해 보상의 참고액,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액, 각종 보상금의 기초 등 단순히 고용관계를 넘어서 사회복지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보상금의 기초 및 참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임

-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1/4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음

-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 최저임금을 4,860원(2013년)에서 350원(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함.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임
-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의 120%)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2012년 기준 24.8%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약 26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여성과 청년, 중고령자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여성과 청년, 중고령자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7.1%로, 남성 15.5%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연령별로는 '30대 미만' 청년층(34%)과 '50대 이상' 중고령자층(23.9%)이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함

- 여전히 미약한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최저임금이 매년 일정하게 상승해 왔지만, OECD 국가 기준에는 물론, 현재 물가 수준이나 생활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임
- 특히 식료품 구입 비중을 나타내는 '앵겔지수'나 주거비 비중을 나타내는 '슈바베 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게 현실임. 지난해 저소득층 가구의 앵겔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고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최근에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2012년 25.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 한 달 생계비가 151만 3천원(2012년 기준)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주장이 제기됨
- 문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자영업자나 영세기업 등으로 시장 경쟁력이나 생존률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는 이들 사업주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한계가 있고, 노사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저성장 체제의 장기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미칠 먹을거리에 대한 위기

-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하고 한국을 비롯한 76개국이 참여해 (2013년 159개국)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왔으나, 2001년 WTO를 강화하기 위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회원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침으로써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블록화에 나서왔음
- 다자간 무역협상을 특징으로 하는 WTO와 달리 FTA는 양국 간의 무역협정으로 WTO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각국이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EU, 중국을 중심으로 다자간 FTA가 추진되면서 3개의 거대 FTA 체제가 형성되고 있음
-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EU 27개 국가들과는 '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 대응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추진하고 있음

- GDP 기준 TPP의 세계 경제 비중은 38.4%, TTIP는 45%, RCEP는 29.4%로 세 개 경제블록은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두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거대 FTA는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양자간 FTA와 같이 개별 국가의 사정을 따져가며 예외 규정을 넣기가 어려워, 개방폭도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TPP의 경우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 금융, 노동 등 비관세와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임

- 한국의 자유무역 추진 현황

- 최근 발간된 2013 WTO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80~2011년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각각 연평균 7%, 8%씩 증가하는 등 세계적인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한국도 지난 1980년에서 2012년 사이 상품 수출은 세계 32위에서 7위, 상품 수입은 20위에서 9위로, 서비스 수출은 18위에서 15위, 서비스 수입은 27위에서 13위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해 옴
- 자유무역협정도 2002년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 현재 총 47개국과 10개의 FTA를 체결함. 현 박근혜 정부도 지난 6월 '새 정부의 신통상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존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TPP와 RCEP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논의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의 FTA 무역 비중을 35%(2013)에서 69%(2017)로 높이는 방안을 세우고 있음

- 자유무역이 가져다 줄 먹을거리 자급과 안전에 대한 위협

- 비교우위론에 기반한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실업과 사회적 불평등 증가, 무역 의존도 심화, 환경과 생태계 파괴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은 특히 농업과 식량 자급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음. 이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생산량과 생산면적이 크게 감소해 1970년 80.5%였던 곡물자급률이 2012년 22.6% 수준으로 떨어졌고, 한·미 FTA와 한·중 FTA에 따른 농업분야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음. 현재 한·중 FTA가 진행 중인데, 중국발 대형 식품 사고가 자주 발생해왔고, 소비자의 63.5%가 "중국 농산물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농촌경제연구원 2012년) 자유무역이 가져다 줄 먹거리에 대한 위기 의식이 큼

- 이런 가운데 TPP와 TTI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유기농소비자연합(Organic Consumers Association)은 TPP가 식품안전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켜 미국인의 먹거리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예컨대 베트남의 항생제 잔류량이 높은 수산물 수입이 미국에 허용될 수 있고, 3천 개의 식품첨가제를 허용하는 미국의 기준이 단지 800개를 허용하는 일본의 기준을 낮춰서 일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함
- 미국 시민단체 아큐파이 몬산토도 TPP 참가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의 GM식품에 대한 표시 법률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TPP 협상에서는 담배와 술에 대한 경고 문구를 규제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논란이 된 바 있음
- TTIP에 대해서도 EU 금연단체가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는 지난 5월 GM 농산물, 성장 촉진제(락토파민 등)가 투여된 소고기 수입 금지 결의안을 채택하여 미국과 TTIP 협상에서 갈등을 겪고 있음
- 2013 WTO 연차보고서는 2012년 현재 세계 총 생산(Global GDP)이 49조 9,920억 달러에서 2035년까지 최소 77조 7,580억 달러, 최대 129조 6170억 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먹을거리 안전과 농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전망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임

● 맛 대신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소고기 등급제가 필요

- 기름기 많은 소고기가 더 맛있는 소고기?

- 지난해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소고기 등급제 변경을 이야기한 데 이어, 현 이동필 농림식품축산부 장관도 소고기 등급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말쯤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소고기 등급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그동안 소고기 등급은 1992년 소고기 도체등급제가 시행된 이후 조금씩 변화를 거쳐 현재는 1++, 1+, 1, 2, 3의 총 5단계의 등급으로 나뉨. 일반적으로 1++ 등급 소고기가 가장 맛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가장 높은 가격이 매겨지고 있음
- 소고기 등급 기준은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육량등급보다는 육질등급을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음. 육질등급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 따라 매겨짐
- 이 중 근내 지방도가 주요하게 평가되는데, 흔히 서리가 내린 모양 같다고 해서 '상강도(霜降度)' 또는 대리석같이 하얀 지방이 근육 사이에 촘촘히 박혀 있는 모습에서 '마블링(marbling)'이라 부르는 근내 지방의 양이 많을수록 맛이 좋다고 해

서 고급육으로 평가 받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마블링 좋은 쇠고기가 맛있다는 것은 세계인의 일반적 기준도 아니고, 등급제 실시로 소비자들의 미각이 크게 왜곡됐다'고 비판하고 있음

- 원래 도체등급제를 시행한 주요 목적은 소고기 수입자유화에 대응해 국내산 소고기의 품질을 높이고 차별성을 부각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소고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음.
- 그러나 국민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1993년 5.2kg, 2000년 8.5kg, 2010년 8.8kg으로 계속 증가해왔는데, 같은 기간 수입량도 9만9천톤에서 22만3천톤, 24만5천톤으로 증가해 와서 급격히 늘어난 수요의 상당부분을 수입 소고기가 대체해 왔음을 알 수 있음

- 현행 소고기 등급제에 내재된 문제점들

-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최고 등급의 소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소의 근내 지방을 높이기 위한 공장식 축산, 풀이 아닌 옥수수 사료 급여, 거세를 통한 사양관리 방식 등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공장식 축산으로 항생제와 첨가물이 과다 투여되고,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이 쉽게 확산되는 환경에서 이를 막기 위해 '살처분' 같은 대량 살상이 일어난 점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옥수수 사료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생산 불안정과 이에 따른 가격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국내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또한 수입되는 사료용 농산물 중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량이 2012년 기준 578만t으로,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의 98%, 전체 수입 사료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음
- 한편, 현행 등급제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2009년 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소고기 구입시 등급을 확인한다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 중 66%였는데, 이 중 33%는 "보다 안전한 소고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등급을 확인한다고 응답해 소비자 상당수가 등급제를 안전성의 기준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등급제의 바람직한 변화가 필요

- 현행 등급제가 가진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음. 지난해 소고기 등급제 변경 논의를 꺼낸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축산 농가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 급식에 학생 건강을 생각해 2, 3등급 소고기를 취급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2, 3등급=저질육'이라는 오해와 한우 축산 농가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음

- 그렇다면 등급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까? 앞선 농촌경제연구원의 여론 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소고기 등급 결정 요인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항생제 사용 여부, 신선도, 위생수준, 유전자변형 사료 여부, 호르몬제 투여 여부, 품종, 연령, 성별, 거세 유무, 다즙성, 향미' 순으로 밝혀 안전성과 관련된 것이 주요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부산의 한 식육식당에서 취급하는 '농가소'는 여물을 먹여 키운 것으로 마블링이 거의 없는 2등급 이하의 소고기지만 노인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또 지방이 별로 없는 부위로 만든 '숙성육'이 한 TV 프로에서 '건강한 육식'으로 소개되고, 유통업체와 식당들도 숙성육을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가는 등 기존 등급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대안적 축산을 지향하는 한살림의 경우 1999년부터 개방식 소 사육과 1마리당 2.5평 면적 확보,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사용금지, 분뇨처리시설 의무화, 축사환경관리, 축사주변 제초제 사용 금지 등을 시행해오고 있음. 또한 동물복지 차원에서 뿔 자르기를 금지하고 거세를 하지 않고 소를 키우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통의 기준 아래 'NON-GMO 및 무항생제사료', '유기축산', '국산사료 한우'와 같은 실천들을 해오고 있음

●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 현황

-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협동조합 설립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2013년 6월 30일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전국에 등록된 협동조합의 수는 총 1,461개로 전월 1,210개 대비 20.7% 늘어남. 이 중 일반협동조합 1,405개(96.2%), 일반협동조합연합회 6개(0.4%), 사회적협동조합은 50개(3.4%)임. 협동조합 인가율은 신청 대비 86.1%(이 중 일반협동조합은 86.1%, 사회적협동조합은 56.2%)로 높은 편임.
-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4곳(한살림서울 포함)을 통해 진행된 상담건수는 총 9,110건이고,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된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상담건수는 약 1,600건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투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상담센터에 대한 문의 내용으로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왜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지, 협동조합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일반 기업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기초적 질문이 45% 정도이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과정 등 중급 수준은 35%, 총회 진행, 신고서 작성 등 설립과 운영에 관한 고급 수준은 20% 정도로 나타남. 또한 상담자의 연령대는 40~50대가 62% 정도이고, 상담자 대부분은 남성(79%)으로 분석됨

-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늘어나고 있음

- 협동조합에 대한 직·간접 자금지원도 늘어나고 있음. 올 초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300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307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공동구매와 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80%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함
- 전북도는 협동조합 활성화 특례 보증제도를 시행하여 전북에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원까지 저금리로 연간 총 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자체 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광주 서구는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에 대해 업체당 최고 2천만원까지 1% 보증요율로 최장 5년간 보증을 지원하고, 광주 남구는 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을 공모해 조합 당 500~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임
- 서울시는 상·하반기 마을기업 선정사업에서 기업당 사업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공간임대보증금은 5년 내 상환조건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했는데, 선정 기준으로 협동조합 운영원리 구현과 구성원 의지, 공익 목적성 등을 제시하고 협동조합 또는 설립 예정인 경우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협동조합 설립을 간접 지원함
- 경남도는 9월쯤 경상남도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안)를 발의할 계획이며, 이 안에는 협동조합 기금 조성을 통한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를 운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한국전력은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재단'과 함께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 발굴사업'을 공모해 9개 협동조합에 총 4억원을 지원함
-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을 통해 SH공사의 임대용 주택 매입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에 연 2%의 금리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용도로 총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융자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소비자참여형 직거래 사업 지원을 위해 시·도별 협동조합, 회사법인, 지방공사 등을 선정해 공동작업장, 로컬푸드 매장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연 3% 금리로 7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는 사업에 총 71억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해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단체별 20억원 한도에서 총 200억원을 3% 금리로 1년 이내 상환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임

- 이밖에 기재부도 최근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협동조합의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힘

- 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도 확대되고 있음

-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부터 조합설립 이후 운영 초기에 필요한 세무, 회계, 이사와 감사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도 확대되고 있음
-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7개 권역(서울·경기·인천, 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제주, 전북, 대전·충청)에 총 17개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설립상담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 권역별(동북, 서북, 동남, 서남)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기존의 전화와 방문 상담 업무 외에도 '협동조합 기초교육',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협동조합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오는 9월 말까지 설립신고 서류 제출을 목표로 50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며, 여기에는 4대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및 심화교육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회계, 세무 등 전문 컨설턴트와 협동조합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해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임

<표 3>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협동조합 컨설팅 프로그램

정부부처 및 지자체	컨설팅 프로그램
기재부	전국 7개 권역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운영 및 컨설팅
서울시	서울 4개 권역별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컨설팅
성북구	협동조합 상담, 교육, 컨설팅 등
경기도	협동조합 멘토지원단 운영,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교육
전라북도	전북협동조합스쿨 운영
광주남구	협동조합사관학교 '제석이와 금당이' 운영, 협동조합 컨설턴트 파견 컨설팅

- 이 외에도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업컨설턴트를 두고 협동조합 컨설팅에 나서고 있으며, '시니어 창업스쿨'을 통해 40세 이상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등을 주제로 위탁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협)한국오픈컨설팅협동조합, (협)마중물 컨설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컨설팅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법인이 설립되기도 했고, 주식회사 등 기업 컨설팅업체들도 협동조합 컨설팅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정부 및 지자체, 민간 협동조합 컨설팅 법인과 개인 컨설턴트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처럼 단기적 성과를 목표로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조합의 설립을 자극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이 과연 협동조합 본래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하게 생존하도록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함

분야별 동향 3

사회 · 환경

● 기후변화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변화

- 106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무더웠던 6월

- 때 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열흘간 장마가 '실종'되었던 지난 6월 서울 날씨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것으로 기록되었음
- 6월 한 달의 평균기온은 24.4도로, 평년기온(22.2)을 2.2도 웃돌면서, 지난해보다 0.3도 더 높은 기온을 나타냄
- 또한 1951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의 계절 시작일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서울의 여름 시작일이 1950년대에 비해 15일 빨라진 5월 27일로 나타났으며, 여름 지속기간 또한 20일 늘어난 121일로 집계됨

- 기후변화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지구는 공룡 멸종 이래 가장 큰 기후변화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100년간 일어날 변화의 속도가 지난 6천5백만 년 사이 어떤 시기보다도 최소 열배나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⁴⁾가 발표됨
- 이 연구는 "과거의 변화를 보면 생태계는 수천 년에 걸쳐 1~2도 변화에 반응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변화는 이런 반응을 단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나게 한다. 일부 종은 이미 이런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 세계 육지 생태계에 큰 스트레스를 미쳐 많은 생물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행동 변화와 진화 및 지리적 적응을 해야 한다고 밝힘

- 기후변화가 폭력성을 증가시킨다?

- 기후변화와 폭력, 분쟁 등의 연관 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⁵⁾도 발표됨. 이 연구는 기온이 올라갈 때마다 폭력범죄나 전쟁 발발과 같은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기후변화에 따라 폭력이 증가하는 데는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며, 농작물 생산 감소 등 경제적인 변화를 그 매커니즘으로 보기도 함. 또한 2050년까지 개인 및 집단 간 무력 충돌이 빈번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력성 증가와 함께 대규모 기술 발전과 정치 변화도 이런 폭력의 위험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임

4) 스탠퍼드대학 연구팀, <사이언스> 8월호

5) 버클리대 연구팀, <사이언스> 8월호

- 기후변화가 수반하는 여러 변화 가운데 해수면 상승 등에 따라 식량 생산과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저지대에 인구가 밀집해 있고 쌀농사를 하는 아시아 지역의 피해가 클 것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식량 부족이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시각⁶⁾도 있음
- 유엔개발계획 역시 기후변화 취약국 상당수가 군사적 갈등의 고위험 지역이거나 정치적 갈등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한 만큼, 전 지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갈수록 우려를 자아내는 후쿠시마의 방사능 유출 사태

- 더욱 심각한 상태로 확산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 지난 7월 22일 일본 도쿄전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원전 방사능 일부가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관련한 정보들이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주변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발암 물질인 세슘의 농도가 며칠 새 1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제1원전 3호기 원자로 건물 5층 부분에서 수증기와 유사한 물질이 흘러나오는 것이 포착되는 등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이 통제 불능상태로 가고 있음이 확인됨
- 매일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 300톤이 바다로 유출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방사능 오염수대책을 직접 마련하겠다고 나섬. 다만 원전 재가동을 찬성해 온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이 참의원선거에 대승을 거둔 다음날에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 유출의 실태와 위험성을 숨겨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 최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에 9개월간 긴급 복구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절반가량이 백혈병 산재인정 기준인 연간 5밀리시버트(mSv) 이상 피폭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일본 내에서 방사능 오염에 따른 각종 피해 소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괴담' ?

- 사고 원전으로부터 방사능이 계속 유출되면서 일본 국토는 물론 태평양 바다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6) 닐 모리세티 영국 기후변화특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기후안보회의', 2013.3

면서 하늘과 바다가 연결되어 있고 인적·물적 교류도 많은 데다 일본으로부터 먹거리의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일본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을 수밖에 없음. 최근 들어 다시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공포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

-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보다(100bq) 더 느슨한 방사능 기준치(370bq)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제기되는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면서 정부차원에서 '괴담 유포자를 색출해 엄벌하겠다'는 식의 매우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책을 내놓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수출을 금지한 49개 품목의 생선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자유로운 상황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시 다른 국가보다 2배 많은 표본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만,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것만 밝힐 뿐 정확한 검출량을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
- 농식품부가 발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세습 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12월 사이 냉장 명태 12건, 냉장대구 4건에서 검출이 있었고, 2012년에는 냉장 명태 34건, 냉장 대구 9건, 냉동 고등어 37건 등으로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해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포획된 참다랑어에서도 다량의 세습이 검출되는 등 오염 수산물을 일본산에만 국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음
- 먹을거리뿐 아니라 화장품 등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방사능 공포' 역시 고조되고 있음. 업체에서는 자체 방사능 검사 장비로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쓰고 있다고 밝혔지만, 모든 제조사들이 자체 방사능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입 통관 시 당국의 방사능 검역 수준이 문제시되고 있음

-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밥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 한살림연합, 두레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생협 등 4개 생협단체와,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만든 '시민 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6월부터 가동을 시작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시작함. 센터는 지난 7월 1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폐수 바다 방류 규탄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음
- 경기도 의회는 7월 16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실태를 검사해 해당 학교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짐

- 일반 업체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일본산 원료를 국산 또는 제3국 수입산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계속해 나타나고 있음. 매일유업의 경우 자사 분유제품에 일본산 원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안심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유아식 원재료의 원산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100% 공개하고 있음. 또한 몇몇 업체에서는 직접 방사능 오염 검사기기를 도입해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일본으로부터 유출되는 방사능 오염을 차단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밥상을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각종 부정과 부패, 부실로 얼룩진 위험천만한 국내 원전들의 재가동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단계별로 신속하게 탈원전 사회로 전환해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농약 사용에 따른 '꿀벌'의 군집 붕괴 현상과 그 심각성⁷⁾

-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살충제로 각광 받아온 네오니코티노이드

- 네오니코티노이드는 식물들이 곤충에 대한 방어기작으로 만들어 온 니코틴을 모방해 만든 유기합성살충제로, 곤충의 신경계에 작용해 방향감각과 단기 기억 상실, 식욕상실 등을 거쳐 결국 경련과 마비 증상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만들
-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곤충에게는 한 시간 안에 화학적으로 유도된 치매증상을 일으키지만 인체에는 별 영향 없이 48시간 이내에 배출됨으로서 큰 각광을 받아 옴
-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가운데 하나인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경우 100여 개 국에서 140개 농작물에 사용허가를 받아 살포되고 있으며, 매년 5억 6천만 유로 규모로 팔려 나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살충제임
- 이미다클로프리드가 판매에 성공한 이유는 식물체 속으로 스며들어 줄기, 잎, 뿌리 등 식물조직 전체에 퍼져 있다가 이 식물을 먹은 곤충을 죽게 만들기 때문임. 특히 이미다클로프리드에 씨앗을 담갔다가 파종을 한 식물이 자라나면 그 속에 약품성분이 가득 들어차게 됨

- 네오니코티노이드의 뛰어난 살충 효과가 '꿀벌'의 군집 붕괴를 야기하고 있음

- 일찍이 아인슈타인은 "지구에서 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로 꿀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꿀벌이 꽃들 사이를 오가며 암술과 수술의 수분을 돕는 것이 사라지면 식물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식탁까지 위협받게 되기 때문임

7) 이 내용은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이 모심과살림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정리한 것이다.

- 꿀벌은 곤충에 의한 수분 가운데 80%를 차지해 식물이 열매를 맺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유엔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인간이 식량으로 먹는 작물 가운데 약 63%가 꿀벌에 의해 수분이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벌들이 줄어들면 곡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곡물사료 부족으로 소, 돼지, 닭 등 동물 사육도 불가능해 결국 인간의 먹거리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됨
- 그런데 네오니코티노이드를 함유한 농약은 저독성으로 알려져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이후 이것이 꿀벌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2012년 3월 이탈리아 연구진은 농약의 종자처리기술이 꿀벌의 집단폐사를 일으킨다는 연구를 발표하였고, 영국 스텔링 대학 연구진도 이미다클로프리트가 꿀벌의 출생률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조사를 발표해 환경부에 제출했음. 프랑스 국립농학연구소 역시 티아메톡삼이 꿀벌의 방향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 2012년 3월 영국, 프랑스 연구팀은 사이언스지에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여왕벌 수를 85% 감소시키고 꿀벌의 길 찾는 능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음
- 또한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농업에 큰 타격을 준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이며, 꿀벌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발표함. 유럽연합은 이런 연구결과에 기초해 바이엘사의 클로티아니딘과 이미다클로프리트, 신젠타사의 티아메톡삼 3종에 대해 2013년 12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키로 지난 4월 29일 결정하였음
- 문제는 국내 등록사용중인 네오니코티노이드계 3종 농약이 총 살충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임. 클로티아니딘 37품목, 티아메톡삼 18품목, 이미다클로프리트 44품목이 그것으로, 적용대상을 보면 수도와 원예 등 60여 작물에 진딧물, 나방 등 110여종의 해충 방제에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형식적인 독성재평가 뿐만 아니라 꿀벌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산림복지와 치유농업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개발을 위한 산림복지? 치유와 공생을 위한 산림복지!

- 산림청은 지난 7월 24일 열린 '산림복지 비전 선포식'에서, 산림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힘. 이 계획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자연 휴양림, 산림

욕장, 도시 숲 등 산림휴양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자연휴양림을 지금보다 46% 늘린 180곳, 유아 숲 체험원 250곳, 산림복지단지 2곳 등 산림복지 공간 850곳을 비롯해 도시 숲 3천 곳과 학교 숲 2천3백 곳을 조성하기로 함

- 당국은 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숲 해설가와 유아 숲 지도사 등 단기 계약 일자리를 장기 일자리로 전환하며, 국민 개개인, 생애주기별 상황에 맞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 분야의 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방침임
-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발의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자본의 국유림지 개발 및 전용, 환경영향평가 약식 절차 등 각종 특혜가 포함되어 있어, 산림복지라는 이름 하에 민간자본의 국유림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산림복지단지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음
- '치유'라는 이름으로 휴양에 대한 수요를 맞춘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이번 계획이 또 다른 개발 사업과 국토 파헤치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힐링'을 위한 또 다른 방법, 치유농장의 가능성

- 해외에서는 농업에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치유농장 모델이 확산되고 있음. 일례로 네덜란드 와게닝엔의 한 시골농장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농사일을 하며 치유를 얻는 곳으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려 130여 명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치유농장이 농가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2001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해 왔음. 현재 치유농장은 천 백여 곳에 이르며, 농장 자립으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고, 정부가 대신 농장이용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기숙 시설 마련, 간호사와 보육 교사, '돌봄 코디네이터' 배치 등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음
- 유럽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치유 농장은 자원봉사와 공동체 복원에도 활력을 주고 있음. 울창한 숲에서 산책을 하고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는 것은 치유의 중요한 방법이며, 특히 정신적 상처를 입은 어린이들의 치유에 효과적임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주말농장과 체험농장이 크게 늘면서 접근과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단순히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농사를 넘어서 치유하는 농사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장치들이 더해져야 할 것임
- 서울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문제 해결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

래, 힐링농업으로 도시농업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도시농업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힘

- 치유는 본연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만큼, 가장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흙을 밟고 자연과 동식물,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면 농업과 사회의 새로운 상생방식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음

분야별 동향 4

정치·사회운동

●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태

- 정보부에서 정보원으로

- '국가정보원'은 1961년 6월 '중앙정보부'로 창설되었고, 1981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로,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 재출범했음. 정부 각 부처별로 나눠진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해서 국가 전체의 통합된 정보를 만들고 해외의 정보를 수집·분석한다는 목적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정보부나 안기부가 국내외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이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해외 활동 중심으로 만들려 했음
-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고,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사찰을 고발하고 국정원이 다시 박시장을 고발하기도 했음. 이후에도 국정원은 박시장 당선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영향력 차단'이나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음
- 그리고 결국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이 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 이제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국외로도 알려져 AP통신이나 뉴욕타임즈 등의 외신이 국정원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함.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이전 군사 독재자들은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고, 반체제 인사들을 고문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수단으로 국정원을 이용했다"고 지적함
-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도 "브레이크가 걸린 한국 비밀기관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고 지적하며 "권력기관과 보수언론의 지원을 받으며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 분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정보기관과 민주주의 문제

- 만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임. 정보기관이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임
- 1971년 미국의 대학생들이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 문서창고에 침입해서 정보기관

이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있다는 문서를 폭로한 바 있음. 그리고 1972년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본부 사무실에 불법도청장치를 부착하던 사람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이 백악관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워터게이트사건'이 벌어짐. 이 일로 1974년 닉슨 대통령은 사임했음

- 이처럼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라면 어느 곳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국정원법도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국정원장·차장 및 기타직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 9조)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 9조 2항). 그런 점에서 현재의 국정원 활동은 어느 편을 드는가와 상관없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이런 정보기관들은 다른 기관, 특히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고 있음. 국회가 국정원의 예산을 심사하지만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관하여 그 이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
- 국정원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쏟고 있는지가 공개되고 감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거스를 위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음. 이런 기관이 국정원장의 지휘에 따라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 결국 국정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문제는 제1야당의 장외투쟁과 사상 최초의 국정원 국정조사 상황을 가져왔으며,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식한 학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 성명과 함께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의 촛불시위로 이어지고 있음

● 정전협정 60주년과 북방한계선(NLL) 논란

- 왜 북방한계선인가?

- 지난 60년간 한국과 북한의 상황은 평화가 아니라 정전(停戰) 상태였음. 정전은 말 그대로 전투를 중단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맺는 협정임.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달리 정전협정문의 서명에는 북한의 김일성과 남일, 중국의 팽덕회, 미국의 클라크와 해리슨의 서명만 있음. 당시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음
- 따라서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는 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 탓도 있고, 한국의 전시작전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논란이 되는 북방한계선(NLL)은 한국주둔 유엔군사령부의 미군총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중국군과 북한군을 봉쇄하기 위해 그었던 선에서 유래함. 정전협정 체결 이후 클라크 사령관은 서해 5도와 황해도의 중간을 북방한계선으로 정했음. 북방한계선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선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한이 스스로 자신의 작전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협의를 통해 협정으로 확정된 국경선이 아님
- 그런데 그 후 북한도 20년 동안 이 선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북방한계선 문제는 공식적인 협의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았음. 그러다 연평도 1차 해전 이후 1999년 유엔군사령부가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라 밝히고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선언을 발표함
- 북방한계선은 북한 경비정의 침입이나 북한어선의 월남과 같은 사건이 터질 때 외에는 거의 얘기되지 않던 사안이었음. 이 사안이 불거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거론하며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임

- 헌법과 북방한계선

- 대한민국 헌법은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 이 헌법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적인 실체가 아님. 한국 헌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는 더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문제이고, 일단 이 규정에 따르면 북방한계선은 헌법상의 영토선이 아님
- 정전협정문을 봐도 육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규정이 있지 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협정문 내용은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는 정도임). 즉 북방한계선의 효력은 해석과 정치력에 달려 있음
- 논란이 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에는 북방한계선을 변경하고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는 내용이 들어감. 이런 변화가 가능하려면 단지 협약만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국이 미국에게서 전시군사작전권을 돌려받는 등 한국의 안보현실이 전체적으로 변화되어야 함. 지금 논란이 되는 문제 역시 북방한계선만 떼어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님
- 그런 점에서 북방한계선의 문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바름. 북방한계선은 한국전쟁의 유산이고, 그 유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의 현재를 사는 우리의 선택이라 할 수 있음

● 정당공천제와 정치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후보 모두가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할 때부터 정당공천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995년부터, 기초의원의 경우 2006년부터 정당공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임
- 정당공천제도의 도입 취지는 ①정당정치의 기반을 다지고 ②중앙과 지방을 연계해 책임정치를 실현하며 ③여성비례 등 불평등한 정치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지방선거가 사실상 ①중앙정치의 심판장이 되고 ②선거공천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며 ③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④후보자만 부각될 경우 선거비용이 늘어나 비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됨

-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입장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

-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우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하기로 당론을 모았고,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노동당(前진보신당)은 반대 입장임
- 소위 진보정당들이 반대하는 것은 정당공천제도 폐지가 여성할당제도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약자들의 정치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지역토호들의 난립을 부추긴다는 이유임. 실제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여성정치인 비율이 3.2%였는데, 2006년에는 13.7%, 2010년에는 19.1%로 증가함. 특히 2010년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을 50%로 할당하고, 지역구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하도록 강제했음. 따라서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이런 불평등을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주장함
-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지함. 경실련의 경우 “정당공천제가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자금과 관련된 잡음을 끊임없이 일으켰다”며 적극적으로 폐지를 주장함. 그리고 7월 23일에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라는 전국 단위 연대단체가 꾸려져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 이 와중에 녹색당 더하기(前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당공천제도 개편이 정치제도 개혁과 더불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 비례대표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정당을 인정하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투표용지를 국회의원석수에 따라 1, 2번으로 정하는 공직선거법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함. 노동당은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대신할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 등의 대안을 주장하고 있음

- 실제 현실은 어떠한가?

- 2013년 6월 19일 파주시 의회는 민주당의 임현주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그를 제명했음.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이유로 시의회가 의원을 제명하는 사례는 없었는데, 임 의원과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제명에 가담했음. 정당의 책임정치가 가능하려면 이런 파행적인 사태에 정당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개입해야 할 텐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이런 상태에서 정당이 책임정치를 주장하는 건 문제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2013년 3월 17일에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2580>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종처럼 부리는 실상을 고발하기도 했음. 단지 공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얹매이기도 함.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정당공천제도의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건 문제임
- 반면 지역에 기반한 건강한 정당이 성장하려면 정당공천제도가 필요함. 그런 정당이 없을 경우 지역토호들의 사조직들이 비공식적인 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정치인을 발굴해서 훈련시키고 지역의제를 발전, 실현시키는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정당공천제도의 폐지는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고 지방의제가 관심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하지만 정당공천제도의 지속이나 폐지, 그 자체만으론 지방선거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함께 변화될 필요가 있음.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맨이 아니다?

- A/S가 좋다는 삼성전자의 비결은?

- 2013년 6월 10일, 부산에서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의 자회사)를 담당하는 동래 프리미엄서비스의 직원 두 명이 해고됨. 이에 반발해 전국의 삼성서비스센터 직원 400여 명이 7월 1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설립하고 창립총회를 가짐
- 이들은 대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즉 도급업체 직원이 자신의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2012년에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인 최병승씨가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판결

을 내림(최병승씨는 이 판결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296일간 철타농성을 해왔으며 8월 8일 농성을 풀고 철타에서 내려옴)

- 6월 17일에는 민주당의 '을을 지키는 길'이라는 모임이 금속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이 모임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련제품의 A/S와 판매를 대리하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A/S 담당 노동자들, 약 1만 명의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해 왔다고 고발함.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해고하는 위장도급이라는 주장임
-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정급여를 받지 않고 콜 건수, 즉 A/S 출장 건수나 제품별 수수료에 따라 급여를 받음. 더구나 차량의 기름값과 밥값, 통신비 등을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해 왔음
- 일반 가전제품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를 제외하면 형편없는 급여를 받고, 일이 없는 비수기에도 항상 대기를 하되 콜 건수가 없으면 그 날은 '공 치는 날'이 된다고 함. 또한 회사가 보통 1년 이내의 용역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고용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 문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모회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2012년 당기순이익이 약 23조 8천억 원에 달하면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의지가 안타깝게도 전혀 없다는 것임
- 이 문제의 복잡함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갑'이라면, 협력업체는 '을', 협력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을'이기에 자칫 '갑-을 관계'가 아니라 '을-을 관계'의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임
- 실제로 7월 21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 80여 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은 바지사장이 아니라며 노동자들의 주장이 협력사의 경영권과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허나 관련 센터가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의 A/S를 담당하지 못하고 관련 노동의 내용과 평가에 같은 노무관리를 삼성전자서비스가 맡고 있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삼성전자서비스만이 아니라 자동차서비스센터, 프랜차이즈, 정수기, 케이블방송사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도급관계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 외주고용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 자기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맡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비교적 싼 임금으로 필요한 노동력만을 사용하려 하는 이런 고용형태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음. 위에서 말한 A/S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옷을 입고, 업무와 관련된 교육도 삼성에서 받고, 그와 관련된 일을 보고, 심지어 수리비도 삼성으로 입금되고,

근무 평가나 사후 관리도 삼성이 담당하는데,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이 아니고 노동법상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함

- 관련해서 최근 소비자생협에서도 매장에 비해 점점 더 그 비중이 줄어드는 공급 업무를 차량유지나 인력 운영 등의 효율화를 위해 외부에 위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이런 필요들을 민간기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생협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노동자를 채용해서 인력을 파견할 경우 이는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에서처럼 논란을 빚을 수 있음
- 생협을 비롯한 협동조합의 경우 단순한 비용절감의 차원을 넘어 협동경제 영역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외부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자활센터 등과 공급업무 계약을 맺는 방식들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실제로 한살림서울의 경우 2012년 8월 8일 강북지역자활센터와 물류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북지역 자활센터 배송팀이 한살림 서울북동부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을 담당하고 있음. 이처럼 공급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거나 지역사회 내의 협동경제 영역과 연계해서 외주공급(공급업무위탁)을 진행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정신에 맞는 일이라 할 것임

● 끝나지 않은 위안부 문제와 평화를 향한 걸음

- 계속되는 위안부 수요시위

-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인정할 것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시위가 1992년 1월 8일 수요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1천 회를 넘겨 현재 20년간 지속되고 있음
- 수요 시위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여성·시민단체, 학생, 평화단체, 종교계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한살림도 2001년 1월에 열린 444차 수요시위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함께해오고 있음. 8월 7일에는 한살림서울 주관으로 제 1086차 위안부 수요시위가 열림
-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최근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며 전 세계적으로 1억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에는 해외 최초로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지기도 했음. 이는 한일간 정치적 사안을 넘어, 인권과 평화, 정의에 관한 이슈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음
- 현재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주최가 되어 대구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한 비용을 모금하고 있으며, 관련 다큐멘터리와 도서, 창작뮤지컬, 문화행사 등을 통해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계속 확산하고 있음

- '평화'의 이름으로 만나는 한살림과 일본 그린코프

- 지난 7월에는 일본 그린코프 생협 여성 조합원들의 '평화의 다리' 방문단이 한살림을 방문, 교류회를 가짐
- '평화의 다리'는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아시아 민중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바탕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적으로 일본 그린코프 생협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조합원 활동임
- 이들은 평화학습회를 진행하면서 1996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해 3.1공원과 독립기념관을 둘러본 것을 시작으로 한살림 조합원들과 평화교류회⁸⁾를 17년째 이어오고 있음. 특히 2000년 이후에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서대문역사문화공원 등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아픈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며 '평화'를 찾는 학습과 모임을 계속해오고 있음
- 역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에서 출발하여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생명살림의 가치는 평화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적대와 분리를 넘어 적극적인 평화 실천의 파트너로서 '평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 정전 60년, 휴전선에서 나누는 경계 없는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 꿈꾸기⁹⁾

너와 나를 나누는 '경계선'은 흔히 서로를 부정하며 끊임없이 싸우는 '전선'이 됩니다. 2013년 7월 27일 오늘, 휴전선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2013년 7월 27일 오늘, 휴전선은 삶의 진실과 무관한 '거대한 미망'입니다. "경계 없음." 혜안을 지닌 어느 선지식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너와 나, 남과 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사이의 경계선을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 없앱니다. 그리고 경계선 없는 한반도,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 '한' 반도, 산과 들과 사람들이 어우러진 본래 모습 그대로의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를 그려봅니다.

■ 우리는 이미 평화로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 성찰: 지금까지 우리는 둘, 혹은 셋으로 갈라져 살았습니다. 하나가 되겠다고 말하

8) 평화교류회는 1995년 열린 '생명공동체 한일교육한마당'에서 당시 한살림의故 박재일 회장이 1989년부터 한살림이 시작한 '우리밀살리기 운동'을 소개하자 이에 감동한 일본 그린코프에서 한살림과의 교류를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9) 이 글은 새로운 '한반도 공동체'를 그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면서도 상대방이 소멸되기를 바랐습니다.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사이 우리의 주위와 내면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무와 풀과 강물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갈라놓았던 경계선을 지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둘이면서 하나고, 셋이면서 하나입니다. 나무와 풀과 바람을 비롯한 온 생명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존재인 것처럼, 북과 남도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 ▶ 비전: 우리는 '따로 또 같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平和)입니다. 남과 북, 도시와 농촌, 여성과 남성이 균형을 이루고,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와 생태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한반도 공동체를 꿈꿉니다. 균형과 조화 속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무궁무궁 살아갑니다.

■ 남과 북의 마음은 '한'과 '조선'으로 이미 통하였습니다

- ▶ 성찰: 남의 마음과 북의 마음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만큼 찢겨졌습니다. 말씨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새 마음은 더욱 강박해져 서로의 존재를 부인할 지경입니다. 인정이 사라지고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탐했습니다. 황금을 숭배하고 경쟁과 속도와 규모를 자랑하던 마음을 돌아봅니다.
- ▶ 비전: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한'과 '조선'은 모두 환한 아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동쪽 나라 한반도는 밝음과 생명살림을 지향합니다. 그 마음을 한 거래의 열망으로 되살립니다. 생명평화 공동체, 도(道)와 덕(德)이 살아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평화의 공동체에서는 차이를 다양성으로 이해합니다. 생명의 시대, 정신문명의 시대, 동아시아의 시대에 한반도는 문명전환의 주인공입니다.

■ 한반도는 지역과 지역이 어우러지는 자치의 숲이 됩니다

- ▶ 성찰: 서울과 평양으로 집중된 자동차와 사람과 돈과 권력의 운명은 결국 공룡과 같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웃사촌의 돌봄이 국가복지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중앙집권'과 모든 문제와 해결책이 국가로 환원되는 '국가주의'를 되돌아봅니다.
- ▶ 비전: 이를테면 '풀뿌리 공동체 연방'입니다. 생명평화 한반도 공동체의 주체는 지역공동체입니다. 전환기 지구촌의 미래도 지역에 있습니다. '참삶(well-being)'의 제공자는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계약 당사자는 지역입니다. 이런 속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부해집니다. 한반도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평화공동체가 됩니다.

■ 호혜와 협동으로 살림의 경제를 일굽니다

- 성찰: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잘 살고자 일하고 돈 버는데, 꼭 일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넘쳐나는데 한쪽에서는 모자란 것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질적 부의 결핍과 과잉을 동시에 넘어서야겠습니다. 자연을 죽이는 경제, 살림살이보다 돈벌이가 앞서는 경제, 무조건 성장해야만 하는 경제를 돌아봅니다.
- 비전: 경제의 본래 모습은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호혜적으로 주고받으며 협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참다운 경제입니다. 또한 이코노미와 에콜로지는 둘이 아닙니다. 경제는 생태의 일부입니다. 농업은 경제의 근본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한반도 경제는 '삶/생명의 경제'이며, 시장과 계획과 호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평화(平和)경제'이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경제'입니다.

■ 우리는 자연과 미래세대와 더불어 사는 생태공동체입니다

- 성찰: 20세기에는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자연은 그저 개조와 이용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깊은 땅속과 먼 바다는 폐기물을 투기하는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강가에 핀 꽃들과 물고기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와의 형평은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뱃속 같은 자연을 우리 손으로 찢고 부수었음을 고백합니다.
- 비전: 이제부터 산과 들과 바다는 이용과 개조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의 한 주체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공동체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지구생태 공동체의 구성이기도 합니다. 자원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한반도의 산과 강, 바다를 깨끗하고 풍성하게 가꾸는 것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2013 DMZ 생명평화민회>¹⁰⁾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다짐

2013년 7월 27일,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여 휴전선과 북녘 땅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강원도 인제군 <DMZ 평화생명동산>에 모였습니다. 남녘의 경향각지에서 온 이웃들과 북에서 살다 남으로 내려온 이들, 동아시아 및 인류의 평화를 염원하는 일본의 벗들과 지구촌 형제자매들, 그리고 인제의 산과 강을 지켜온 주민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마음 속 휴전선을 지우고 하나 된 한반도를 그려봅니다. '뭇 생명과의 화해', '온 인류의 평화', 그리고 '한겨레의 통일'을 다짐합니다.

하나.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정전 60년, 고착되고 격화되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둘. 무엇보다 평화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불가피한 전쟁', '핵무기를 통한 억지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전쟁과 핵무기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셋. 거래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비무장지대(DMZ)의 존재와 북녘 동포들의 염원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반성하며 형제자매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넷. 어린이와 청소년을 평화와 통일의 주인공으로! 하나 된 한반도는 미래세대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상처 없고 선입견 없는 청소년이 바로 평화세대, 통일세대입니다.

다섯. 바람과 강물, 창공의 새,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에는 분단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기, 생명평화로 하나 된 한반도를 일구어 나겠습니다.

2013년 7월 27일

<2013 인제 생명평화민회> 참가자 일동

10)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인제에 있는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열린 '2013 DMZ 생명평화민회'에서 참가자들이 결의한 내용이다. '뭇생명과 화해를, 온인류에 평화를, 한거레에 통일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일본, 중국, 홍콩 등에서 온 성직자와 탈북동포, 중국동포, 사할린동포, 국내 생명평화운동가 등 350여 명이 참여했으며,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참가단체로 기획과 진행 과정에 함께하였다.

살림의말

한살림, '협동공동체'를 꿈꾸다

- '쌍호공동체'와 '흙공동체'를 통해 본 '농민' 생산자의 꿈 -

2013년 7월 한반도 서해 바닷가에 2,000여 명의 '꿈'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색 상의에 새겨진 꿈, 바닷가 백사장에 세워진 솟대의 꿈, 그리고 이틀간 한살림 가족들을 주인공으로 연출한 가설무대에서 꿈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생산자대회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19~20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상록해수욕장에서 <2013 한살림생산자대회>가 열렸습니다. 2005년 경북 울진에서의 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전국의 농민생산자, 가공생산자, 그리고 각 지역 한살림생협의 활동가와 실무자 등 한살림 역사상 가장 많은 2,000여 명의 한살림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 정다운 인사를 나누고, 몸빼 입고 선글라스 쓴 선남선녀들이 뽕짝과 디스코 춤사위를 즐기고, 한판 대동놀이로 한 여름밤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먼 하늘과 바다에 뜬 두 개의 달 사이에서 막걸리 잔을 주고받으며 한살림과 인생을 논하고 나비의 비상을 꿈꾸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함께 하는 농업살림!" 한살림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불어 한살림을 이루는 꿈.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냥 생산자가 아니라 '농민' 생산자의 꿈입니다. "함께 하는 농업살림"의 그 주인공들 말입니다. 1년 만에 사라지긴 했지만, 1990년 당시 농민생산자들과 농민운동가들을 설레게 한 음성 협동농장의 꿈, 장장 35년간 415회의 월례회의로 이어온 의성 쌍호공동체의 꿈이 있습니다. 로버트 오웬의 뉴 하모니(new harmony)보다 높고, 협동조합 열풍보다 뜨거운 한살림 생산공동체의 꿈이 있습니다.

1990년 협동농장 '흙공동체'의 스러진 꿈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0년 5월, 한겨레신문에 음성 협동농장 기사가 나왔습니다. 15쪽 사회면에 제법 큰 기사로 소개되었습니다.

"무농약 영농 20년 '열매'"

"충북 음성 협동농장 '흙 공동체'"

"4가구 분업... 소비자와 직거래"

"수익 배당 땅보다 노동력 비중"

1986년 12월 한살림이 문을 열던 때부터 유기농 쌀을 공급해온 음성 성미마을의 최재명, 최재영 형제를 중심으로 공동노동/공동분배의 협동농장이 태어났습니다. 이미 1970년부터 농약 없는 농사를 지어 무공해마을로 유명해지면서 얻은 사회적 관심과 한살림과의 직거래를 물적 토대로 새로운 꿈을 펼치고자 한 것입니다. 논 2만 1천 평과 밭 5천 평의 농장이 마련되고 공동기금으로 퇴비장도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품을 사지 않고 전적으로 공동체의 협동적 힘으로만 농사를 지으려 했습니다. 2.5톤 트럭을 마련해 서울 등 소비지로의 직송체제도 갖추었습니다. 공동체적 삶을 위해 공동식당과 창고, 탁아소 등도 구상하였습니다. 특히 토지 출자에 따른 배당보다 품, 즉 일의 양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점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4월부터는 흙공동체에서 생산된 배추, 무, 파, 상추, 썩갓 등의 채소와 쌀을 한살림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흙공동체와 한살림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단오행사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해 11월에는 경향신문에 무공해농사 붐의 대표적인 사례로 흙공동체가 소개되었습니다. “오염 식품으로부터 생명을 살려보자는 게 우리 농민들이 무공해농산물을 생산한 첫 번째 이유” 라고 말하는 생산자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널리 알려져 있듯이 흙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안팎에서의 역할분담과 노동량에 대한 획정과 결산과정에서 불신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만, 간단치 않습니다. 쉽게 공동노동/공동분배의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그 이면과 속내는 훨씬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기농업에 기초한 생산공동체의 꿈은 부질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흙공동체의 경험은 한살림 최초의 본격적인 생산공동체 시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후배들의 입장에서 ‘협동’의 의미, ‘관계’의 의미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한살림 생산자 협동조직의 모델은 무엇일까? 한살림 생산자 조직의 꿈은 무엇일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흙공동체의 짧은 실험이 무겁게 되물었습니다.¹¹⁾

415번째 월례회의, 의성 쌍호공동체 35년의 꿈

오늘은 8월 5일, 양파 수매 후 출하비용 정산을 위해 모인 김에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경북 의성 쌍호공동체의 월례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허춘학 회장님의 개회와 함께 성호를 긋고 ‘농민을 위한 기도’를 낭송

11) 음성 흙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낸 「살림의 농사꾼 땀과 삶의 기록」 최재명 님의 구술과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껴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기사로 드문드문 발견됩니다. 그리고 수십년간 가톨릭농민회에 활동하신 어느 원로와의 대화에서 약간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합니다. 아래는 기도의 일부입니다.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 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1978년 3월 가톨릭농민회 쌍호분회 월례회의로 시작하여, 1년에 11차례의 월례회의와 연간 1차례의 정기총회를 이어왔습니다. 월례회의 역사는 곧 쌍호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올해 8월 5일로 무려 415번째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가 2013년이니까 35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쌍호공동체는 유명합니다. 부부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월례회의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35년간 가톨릭 신앙공동체이자 생산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해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한때는 수세(水稅) 싸움과 농지세(農地稅) 싸움으로 농민운동사의 전설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90년대 초부터 생명농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부터는 소농이 중심이 되는 다품종소량생산, 유기(자급사료)축산과 생태순환농업, 도농협력방식의 송아지 입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한살림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인 양파 생산지로 유명하고, 『살림이야기』 독자들에게는 김정상·조옥희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어여쁜 사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님, 진상국 님과 같은 초기 공동체를 이끌었던 선배들로부터 김정상 님, 허춘학 현 회장 님으로 이어지는 사람의 역사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5년을 이어온 월례회의는 이구동성 쌍호공동체의 힘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1권이 사라져서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쌍호공동체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 연구 목적으로 가져갔다가 분실했다고 합니다), 두툼한 공책에 100회, 200회, 300회, 400회, 월례회의의 기록을 또박또박 새겨 넣었습니다. 202회 월례회의록에는 어느 회의에서나 보게 되는 ‘시간 엄수’라는 말이 나와 미소를 짓게 합니다. 또 어느 회의에선 시위를 위한 현수막과 전단 배포의 역할분담을 토론했습니다.

‘존경’이란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생산공동체의 힘이 느껴집니다. 한살림의 뿌리가 눈에 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쌍호공동체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故박재일 회장님의 쌍호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생각납니다. 1985년에 간행된 『공동체문화』라는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¹²⁾

“쌍호공동체는 생활공동체운동으로 상당히 성공을 했고.... 실제로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는 이유를 자체 내에서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더군요. 첫째는 그 마을에서

12) 박재일 회장님을 비롯해, 이병철님, 정성현님, 정호경 신부님, 최재영님이 함께한 좌담회였습니다. 1985년에 발행된 공동체문화에 실렸습니다.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발행한 「생명운동자료모음」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칙적으로 농민회 교육을 받는다는 점..."

쌍호공동체의 미덕은 생산출하 조직을 넘어서 스스로 삶의 대안이 되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주체가 되어, 생산과정뿐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과 학습, 그리고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른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라 할 수 있습니다. 쌍호공동체는 '소농' 공동체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마을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공장식 농업, 장사꾼 농업을 지금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땅과의 관계를 살리는 '유기'농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자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영성으로 하나가 됩니다.

새로운 한살림 협동공동체를 향하여

쌍호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살림의 농사꾼 땀과 삶의 기록」을 읽으며 한살림 농민 생산자의 땀과 삶, 그리고 꿈을 생각합니다. 강수옥 님이 19살부터 35살까지 썼다는 일기와 이제는 널리 알려진 정광영 님의 농사일지에는 쌍호공동체의 월례회의록에 버금가는 절절한 삶의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록은 사라지고 없지만, 흙공동체에서 우렁이농법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농업과 한살림 마음을 지켜온 최재명 님의 올곧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쌍호공동체의 '양파'가 그렇듯이, 강수옥 님의 '딸기'와 제주도 이영민 님의 '감귤'과 최재명 님의 '쌀' 안에 한살림 생산자 공동체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열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고 사람도 많이 바뀌었으니 공동체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협동농장을 넘어서는 한살림의 철학이 잘 살아나는 '새로운 공동체상'이 정립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살림의 선배님들의 꿈은 분명 '봉건적' 공동체와 '근대적' 협동조합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수직적 위계로부터 자유롭고 여성이 주인공이 되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새로운 협동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3-40여 년 전 한살림운동의 선배님들이 제안한 '협동적 생존'과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협동'농장과 '협업'농장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제 숙고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레와 품앗이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부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살림, 혹은 공생(共生)의 참 뜻을 깊이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협동공동체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요? 415번째 월례회의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난 새로운 공동체의 가치와 앞사귀와 열매는 어떤 모양일까요? 가톨릭농민회의 지도신부이셨던 고정호경 신부님의 말씀처럼 농촌과 도시에서 "거자씨처럼 작게 누룩처럼 확산되게" 생활/생산 공동체를 만들고 또 연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도시의 소비자들은 공동체공급이 사라진 이후 마을모임과 지역살림운동을 통해 생활공동체를 되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생산지에서도 협동공동체에 대한 오래된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한살림 생산자들의 기초조직인 생산공동체가 있습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에서는 '생산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 한살림 생산공동체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과 출하를 책임지고,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한살림운동을 실천합니다.
- 한살림 생산공동체는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이웃과 마을을 돌아보고, 생명농업과 한살림운동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 한살림 생산공동체는 생산의 기회를 고루 나누어 갖습니다. 또한 전통농업을 지키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살림 생산공동체는 농업을 지키고 식량자급을 추구합니다. 이웃과 마을을 살려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월례회의를 통해 나와 우리, 한살림과 농업살림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한살림운동의 실천적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꼭 같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소속으로 이미 98개의 생산공동체가 있습니다. 올해도 평창 선애골 공동체, 무안 생기찬 공동체가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회장을 지낸故최재두 님이 어느 소식지에 쓴 글이 생각납니다. "벌레 우리 논으로 다 날아온다." 거기 한살림 생산공동체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생명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족1: 이번에는 한살림운동 초기 생산공동체의 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산, 홍천, 괴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순환)농업 모델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족2: 「한살림 20년, 햇살과 바람 정직한 땀의 기록」에도 원주의 지역사회개발운동과 더불어 가톨릭농민회가 한살림운동의 뿌리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살림의 탄생과 성장에 가톨릭이 그만큼 큰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생산자조직의 경우에는 지금도 그 자취가 뚜렷합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형제·자매애로써 연대하고 교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격월간 정세와동향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9호

책임편집/이슈진단 | 정규호

분야별동향 | 박지은 하만조 김현 하승우

살림의말 | 주요섭

펴낸날 2013년 8월 9일

펴낸이 박맹수

펴낸곳 모심과살림연구소

격월간 정세와 동향

모심의 눈살림의 길

제9호